

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M&A의 규제완화

- 일본정부가 자사주를 사용한 M&A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중소·벤처기업에 의한 재편을 지원하기로 함
 - 주요 촉진책으로는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유예와 매수 절차 간소화, 자사주를 사용한 매수 촉진 등임
- M&A 촉진책은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에 M&A의 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사업재편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
 - 특히, 이번 M&A촉진책은 후계자難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폐업급증으로 인한 고용과 기술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M&A를 폐업의 받침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주목됨

□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유예와 매수절차 간소화를 통한 M&A촉진

- 일본정부가 자사주를 사용한 M&A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중소·벤처기업에 의한 재편을 지원하기로 함
 - 매도자에게 들어오는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동시에 매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
- 이에 따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현금이 없는 벤처기업이 매수를 추진하기가 쉬워짐
 - 사업계승을 포함한 중소 비즈니스의 활용법을 확대하여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
-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일련의 규정변경을 담을 예정임
 -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 맞추어 기업이 재편을 추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, 이르면 2018년 여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방침임

□ 매도자, 매수자 쌍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정

- 새로운 규정은 자사주를 사용한 매수에 얹힌 규제를 매도자와 매수자의 양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임

- 매도자에게 효과가 큰 것이 회사매각이익에 대한 과세의 연기임
- 상대방의 주식을 인수한 회사를 매각하면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「들어온 것으로 간주하는」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함
- 이것이 M&A에 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인수한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기까지는 과세되지 않도록 함
- 바로 稅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매각을 단행하기 쉬워질 것이며 사업매각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폐업에 휘말려 결과적으로 고용과 기술이 타격을 받는 사태를 피하는 효과도 있음
- 과세에 대한 우대는 앞으로 정하는 특별사업재편계획의 지침에 따른 안건에 한하며, 생산성 향상이나 재무 개선이 예상되는 것 등이 적용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
- 한편 매수자에 관해서는 TOB(주식공개매입)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회사법상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
- 일정 규모를 하회하는 매수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없게 됨
- 현재는 TOB에 의한 매수만 예외취급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공개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매수의 경우에도 총회를 개최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됨

□ 자사주를 사용한 매수 촉진

- 미국에서는 신흥기업이 자사주를 사용한 매수로 급성장을 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왔음
- 일본에서는 자사주를 사용한 수법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, 일본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M&A의 역할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

□ 대폐업시대에 대비, M&A에 자사주, 완전자회사도 지원

- 일본정부가 자사주를 사용한 M&A의 규제완화에 착수한 것은 매수나 사업재편을 활발케 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임
- 특히, 고령 경영자의 은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후계자難에 직면하는 소위 대폐업 시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음

- 일본은 현재 산업경쟁력을 지탱해왔던 중소기업군이 존속의 위기에 처해있음
 - 일본의 기업 421만개사 중 중소기업은 99.7%, 종업원수에서도 70%이상을 점함
 -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앞으로 전체의 30%에 해당하는 127만 개사에서 후계자가 없는 상태가 될 전망이며 흑자이면서도 회사를 접는 사례도 많음
 - 경제산업성이 폐업급증의 영향을 예측한 바에 의하면, 앞으로 후계자難을 방지하면 2025년까지 10년간 고용이 650만명 GDP가 22조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

□ 신속한 그룹경영을 위해, 완전자회사로의 전환절차 간소화


-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경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,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현재보다 간소하게 하는 개정도 담을 예정임
- 일본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합계액을 보면 일본이 2017년 5월말까지의 10년간에 7% 감소했던 것에 비하여 미국은 60% 증가했음
 - 미국은 절반이 교체되는 등 신흥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, 신흥기업이 대두 되는 때에 잘 사용되는 것이 자사주를 사용한 M&A임
 - 일본의 상위종목 교체는 30%에 그쳐, 새로운 종목이 부족한 것이 시가총액의 정체에 직결되고 있음
- 일본정부는 그 원인의 하나로 자사주를 사용한 M&A의 회피가 있다고 보고 규정변경에 착수하기로 한 것임
 - 예를 들면,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반도체는 M&A가 계속되고 있는데, 일본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국기업 매수도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에 의한 미국기업의 매수도 전부 현금임. 주식을 사용하는 미국기업과는 다름

□ 완전자회사의 여건도 완화

- 이번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개정안에서는 완전자회사의 여건도 완화함
 - 친회사가 소수 주주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고 주식을 금전으로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9/10 이상 보유에서 2/3이상으로 함

- 소수 주주가 있으면 친회사가 그룹경영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 - 이에 소수 주주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경영판단을 하기 쉽게 함
 - 그러나 소수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의 과제도 남아 있음

□ 시사점

- 아베 정부 성장전략의 양류는 기업재편 촉진, 규제완화로 구성되고 있음
 - 기업재편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은 1개 업종당 기업수가 많은 것이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
 - 이에 구체적인 사업재편책으로서,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, 법인세를 연장한다든지, 친회사를 등록하기 위한 세금을 경감하는 등 가능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음
 - * 작년 8월말 시점에서 사업재편은 43건, 특정사업재편은 5건이었음
 -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신사업이 규제에 저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음
 - * 또 기업이 법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규제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실증특례제도도 있음
- M&A 촉진책은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에 M&A의 유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업재편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
- 특히 이번 M&A 촉진책은 후계자難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폐업급증에 따른 고용과 기술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M&A를 폐업의 받침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큼. 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8.2.1.)